

북한 지역

북한 지역은 1953년 7월 정전 협정 체결로 설정된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을 말한다. 북한 지역의 전체 면적은 123,138km²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 223,516km²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지역의 인구는 2017년 현재 약 2,501만 명이고, 인구 밀도는 남한 인구 밀도 512.6명/km²의 40% 수준인 203.1명/km²에 그치고 있다. 북한 지역은 동쪽으로 동해, 서쪽으로 황해와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동북 지방과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접해 있다. 중국과의 국경선은 1,353.2km에 이르며, 신의주-단동 구간은 압록강철교 등 교량을 이용하여 도로 및 철도로 연결된다. 러시아와는 16.2km를 접하고 있으며, 나선-하산을 잇는 철도로 연결된다. 남쪽으로는 황해북도 개성시와 장풍군, 강원도의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 창도군, 금강군, 고성군 등이 휴전선을 경계로 하여 남한의 경기도 및 강원도와 접하고 있다.

1945년 광복 당시 북한 지역의 행정 구역은 6개 도, 9개 시, 89개 군, 810개 읍·면이었다. 그러나 1952년 12월 행정 체계 및 구역 개편을 통해 도(특별시)-시·군-읍·면-리(동)의 4단계 행정 구역 체계에서 면을 폐지하였고, 도(직할시)·시(구역)·군-읍·리(동·노동자구)의 3단계 행정 구역 체계로 개편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행정 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중요한 변화로는 최근 경제적 목적으로 시행한 나선시와 남포시의 특별시 승격을 들 수 있다. 2017년 현재 북한은 1개의 직할시(평양직할시), 2개의 특별시(나선특별시, 남포특별시), 9개의 도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지역의 지형은 백두대간인 낭림산맥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강남산맥, 적유령산맥, 모향산맥 등이,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에 걸쳐 함경산맥과 부전령산맥 등이 있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전체적인 지형은 북부와 동부가 높고 남부와 서부로 갈수록 점차 낮아진다. 이러한 지형의 영향으로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 예성강 등 황해로 흐르는 강들은 산악 지대를 벗어나면 완만한 경사를 가진 곡류 하천의 특성을 보이지만, 두만강, 남대천 등 동해로 흐르는 강들은 하천의 길이가 짧은 직류 하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요 평야인 평양평야, 재령평야, 연백평야 등은 주로 황해로 흐르는 큰 하천들을 중심으로 서해안 지대에 발달해 있다.

북한 지역은 지질적으로 선캄브리아 시대에서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광물 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마그네사이트,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금, 운모, 형석 등 8종 광물의 경우 세계 10위권 내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철, 은, 납, 아연, 구리, 니켈, 코발트 등도 세계적으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부존 광물 중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40여 종에 이른다.

북한 지역의 기후는 온대 지역에 속하나, 대륙성 기후의 특성을 보인다. 겨울철에는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북서풍의 영향으로 매우 춥지만, 여름은 태평양 남동풍의 영향으로 습기가 많고 더운 특성을 보인다. 북한 지역의 연 강수량은 약 600~1,500mm에 이르며, 이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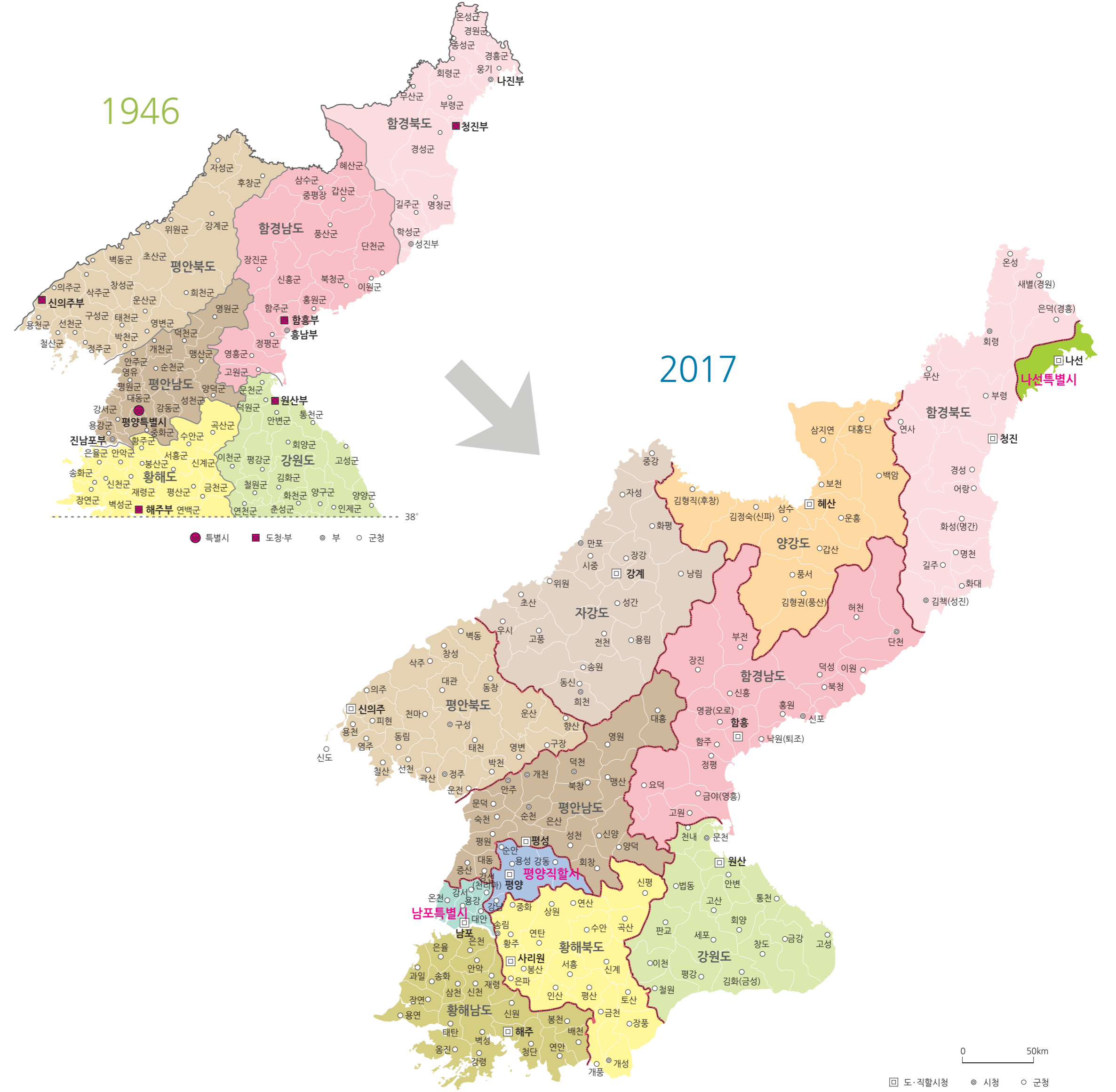
운데 53~63%가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내린다. 또한,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남한에 비해 적은 편이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상당히 크다. 북한 지역은 생태적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이 풍부한 편이었다.

북한은 1960년대 이후 지속된 4대 군사 노선의 하나인 '전 국토의 요새화' 정책,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자연 개조 5대 방침에 따른 '다락밭(산비탈에 계단형으로 만들어진 밭) 개간', 1980년대에 시작한 '새 땅 찾기 사업' 등으로 산림 훼손이 늘어났다. 특히 1990년대 경제난으로 식량, 연료 등을 얻기 위해 산림의 이용이 높아지면서 산림의 황폐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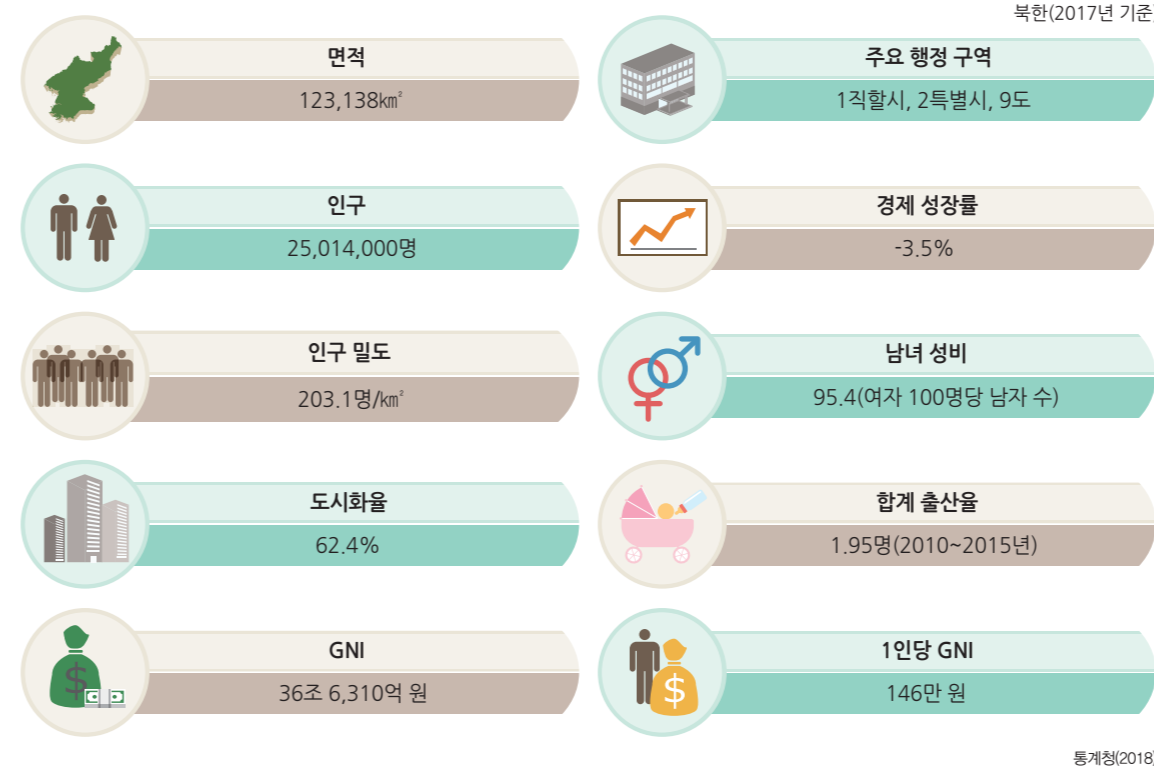
2007년 10월 남북 정상 회담의 결실인 10·4 선언에서 "농업, 보건 의료, 환경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함의"하였고, 이후 "남과 북은 영양양 조성과 이용, 산림녹화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2008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0년 5·24 조치로 인해 산림 당국 간 산림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지원 단체에 의한 산림 복구 지원 사업도 중단되었다. 이후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 회담 결과 합의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우선 과제로 남측 정부는 산림 협력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 2018년 7월 4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산림 협력 분과 회담이 개최되면서 남과 북 간의 산림 협력은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행정 구역

행정 구역의 변화



북한 지역 개괄



북한 행정 구역 현황

구분	2017년								
	시	군	구역	구	지구	읍	리	동	노동지구
평양직할시	-	2	18	-	-	2	57	284	10
나선특별시	-	-	-	-	2	-	12	20	-
남포특별시	-	2	5	-	-	2	49	73	5
평안남도	5	14	-	2	-	14	347	118	26
평안북도	3	22	-	-	-	22	484	88	31
함경남도	3	15	7	1	1	15	465	160	35
함경북도	3	12	7	-	-	12	253	134	44
황해남도	1	19	-	-	-	19	419	26	11
황해북도	3	18	-	-	-	19	393	78	8
강원도	2	15	-	-	-	15	379	61	7
자강도	3	15	-	-	-	15	229	68	23
양강도	1	11	-	-	-	11	143	25	67
합계	24	145	37	3	3	146	3,230	1,135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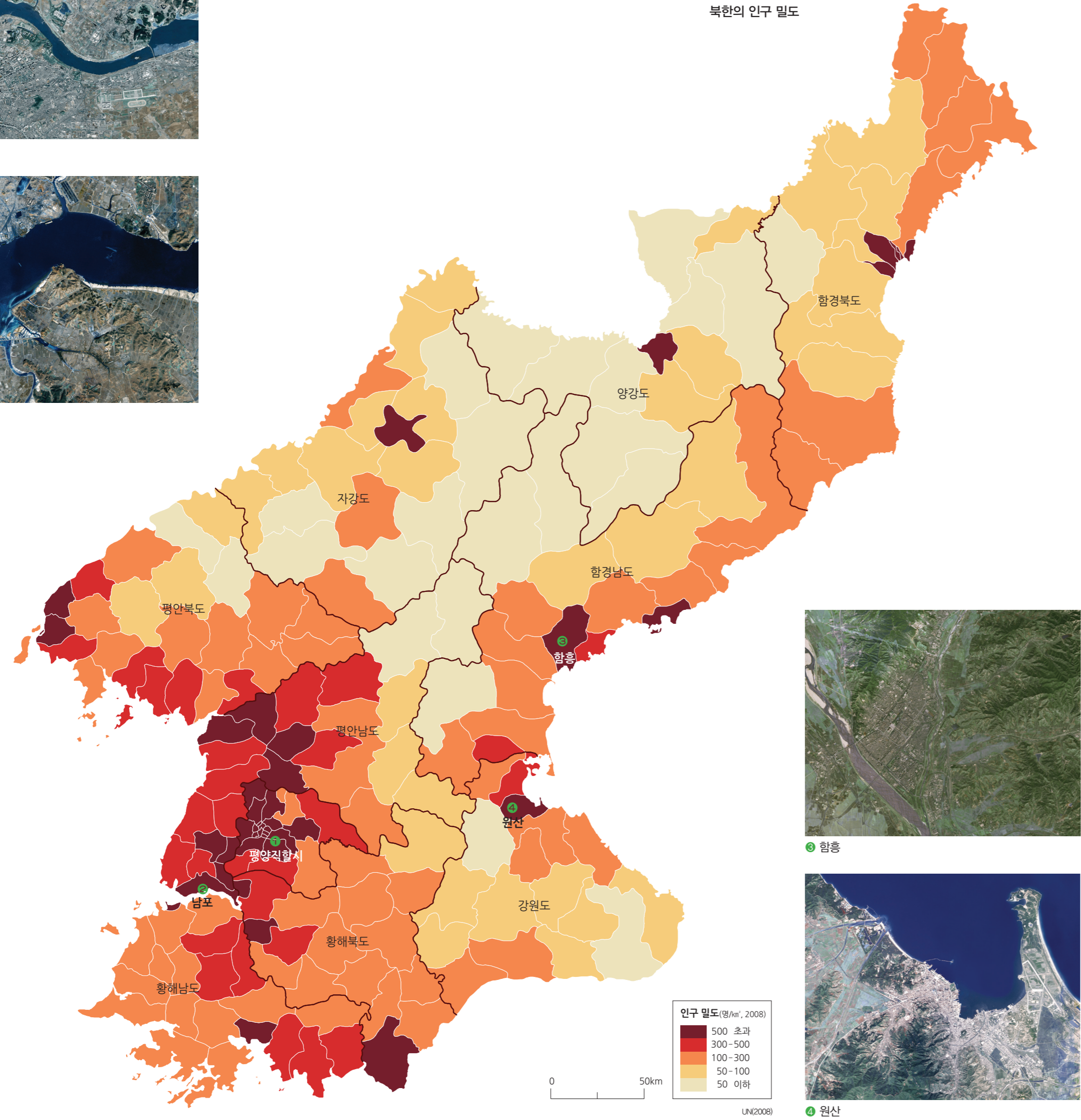
북한의 인구와 도시



1 평양



2 남포



3 함흥



4 원산

광복 이후 1946년 북한 지역의 전체 인구는 약 926만 명 정도였다. 그러나 6·25 전쟁을 겪으면서 급감하여 1953년에는 약 849만 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점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1958년에 처음으로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고, 1980년대 후반에 2,0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북한 중앙통계국이 공표한 인구 자료에 따르면, 경제난 등의 영향으로 북한 지역의 인구는 1992년에 처음으로 손감소를 기록하였다. 이후 1993년부터 매년 꾸준히 약 1% 내외의 인구 성장률을 기록하여 2004년에 전체 인구가 2,400만 명을, 그리고 2017년에는 2,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지역의 인구는 주로 고도가 낮고 평야 지대인 남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평양직할시를 중심으로 평안남도 지역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 반면에 산악 지대가 많은 북동 지역(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은 해산시, 청진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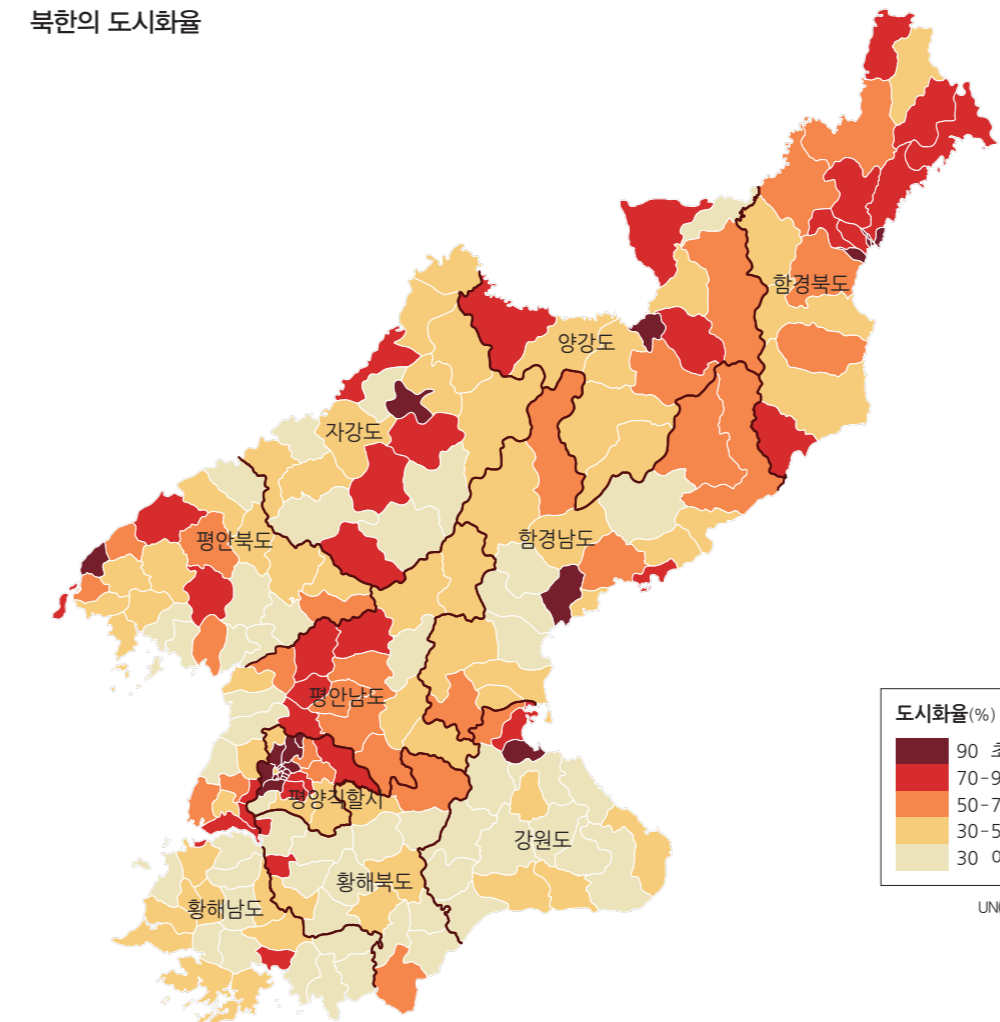
흥시, 강계시 등 일부 도시와 동해 연안 지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은 인구 밀도를 보이고 있다.

유엔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2008년 북한 지역의 5세 이상 이주 인구는 총 234,817명으로 전체 인구의 1%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북한의 지역 간 인구 이동이 활발한 편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도별로 이동자 수를 살펴보면, 평양직할시와 평안남도의 이주 인구가 가장 많다. 특히 평양직할시의 경우 북한 지역 전체 전입 인구의 28.3%를 차지하고 있어(전출 인구는 10.2%), 전체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과 많은 수의 전입 인구를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 다른 북한 지역 중에서 평안남도과 함경북도만이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고, 나머지 지역 모두 높은 인구 유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함경남도는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의 약 2배에 가까운 정도로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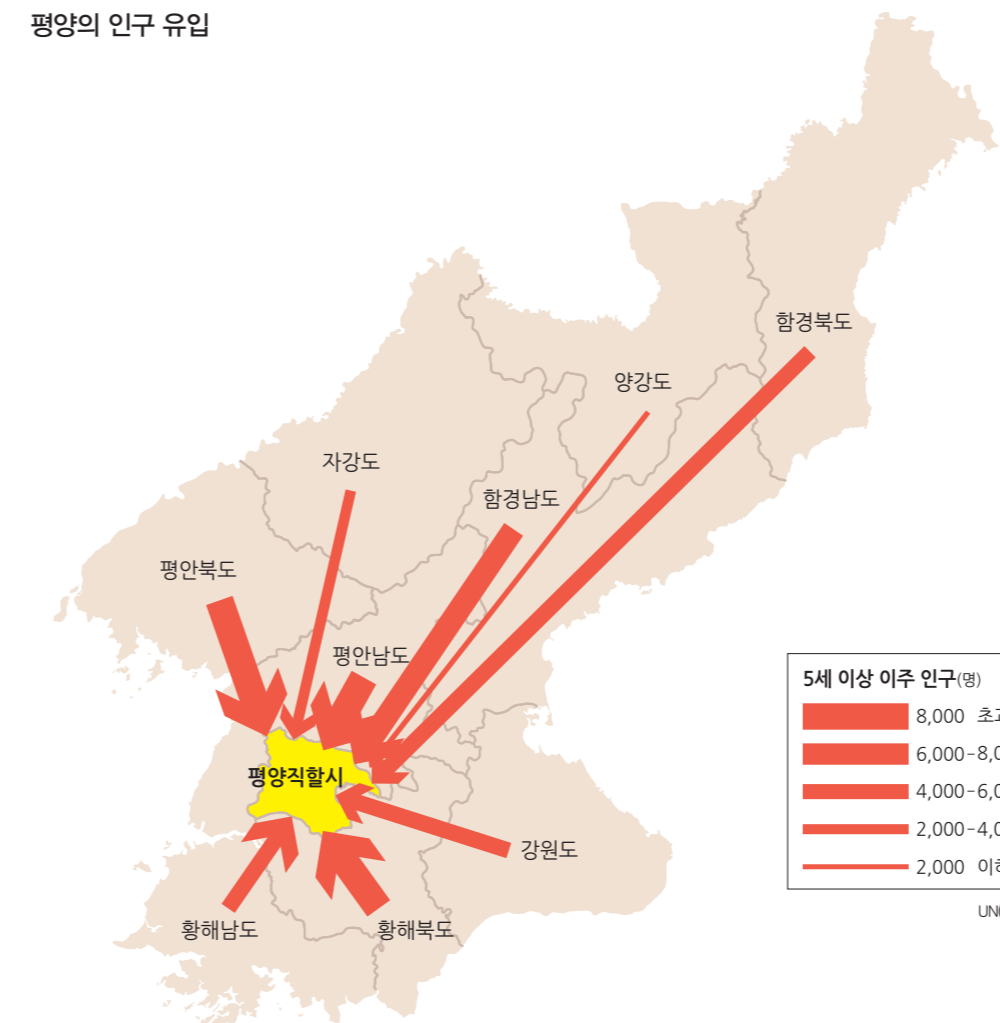
평양직할시의 경우 전체 전입 인구의 30.2%가 평안남도 출신이

며, 뒤를 이어 황해북도가 13.6%, 평안북도가 13%를 차지하고 있다. 평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대체로 전입 인구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평양의 전출 인구는 평안남도가 40.2%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외 다른 지역들로의 전출은 전반적으로 고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평양의 전입 및 전출 인구의 구성에서 또 다른 독특한 양상은 다른 지역보다 양강도와 자강도로의 인구 이동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평양에서 양강도와 자강도로의 전출 인구 비율은 0.01%와 0.03%이며, 양강도와 자강도에서 평양으로의 전입 인구는 0.03%와 0.04%에 그치고 있다. 이는 양강도와 자강도의 인구가 적다는 사실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으나,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강원도의 경우 평양으로의 전출 인구는 8.5%, 전입 인구는 14.3%인 것을 고려하면, 북한 지역의 대표적 낙후 지역인 양강도와 자강도의 사회·경제적 조건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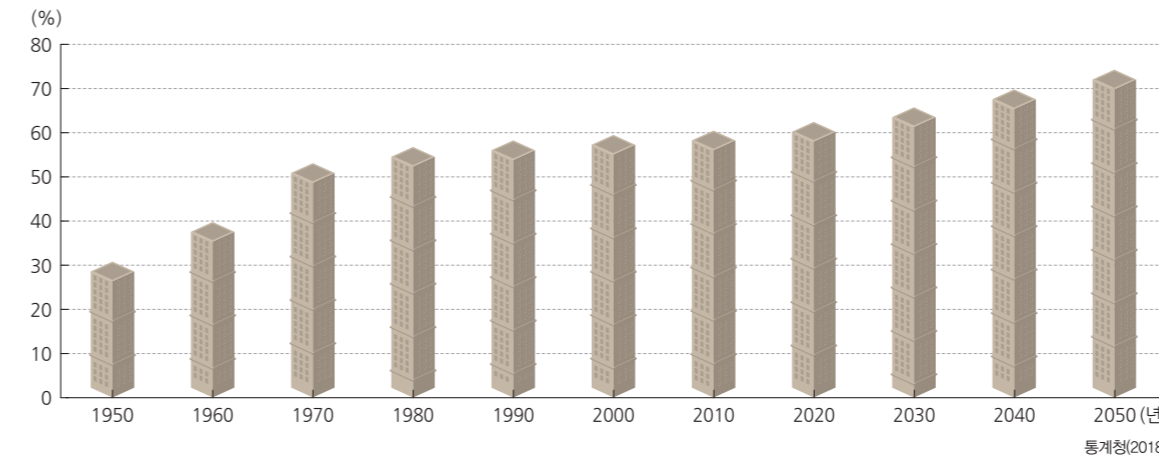
북한의 도시화율



평양의 인구 유입



북한의 도시화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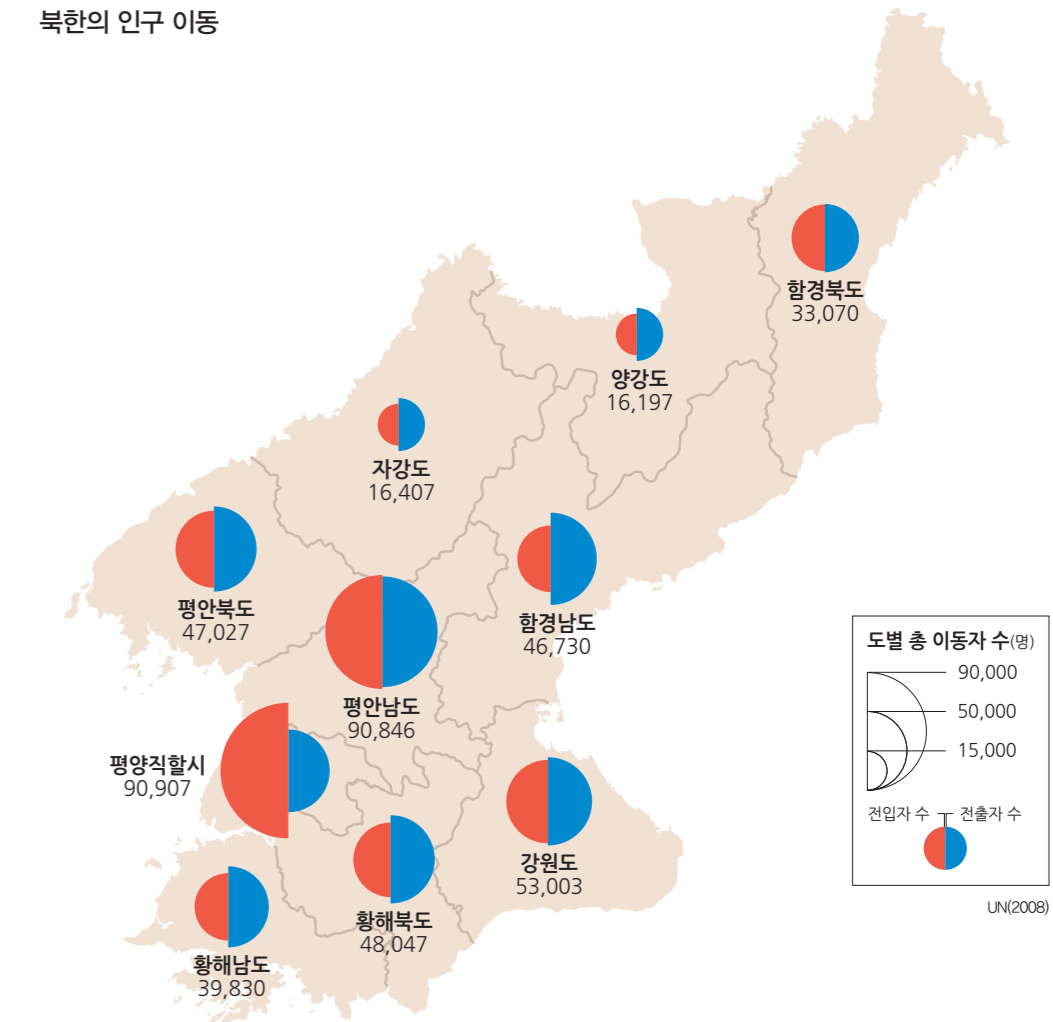


2008년 현재 북한 지역은 총인구의 64.6%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평양직할시의 경우 도시 전체 인구의 86.7%가 시가화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북한 지역에서 도시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지역이다. 뒤를 이어 나진·선봉 경제특구, 청진시 등의 주요 도시가 있는 함경북도는 전체 인구의 70.7%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남포특별시가 소재한 평안남도는 64.9%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북한 지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도시화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도들은 모두 평균 이하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 지역은 도시화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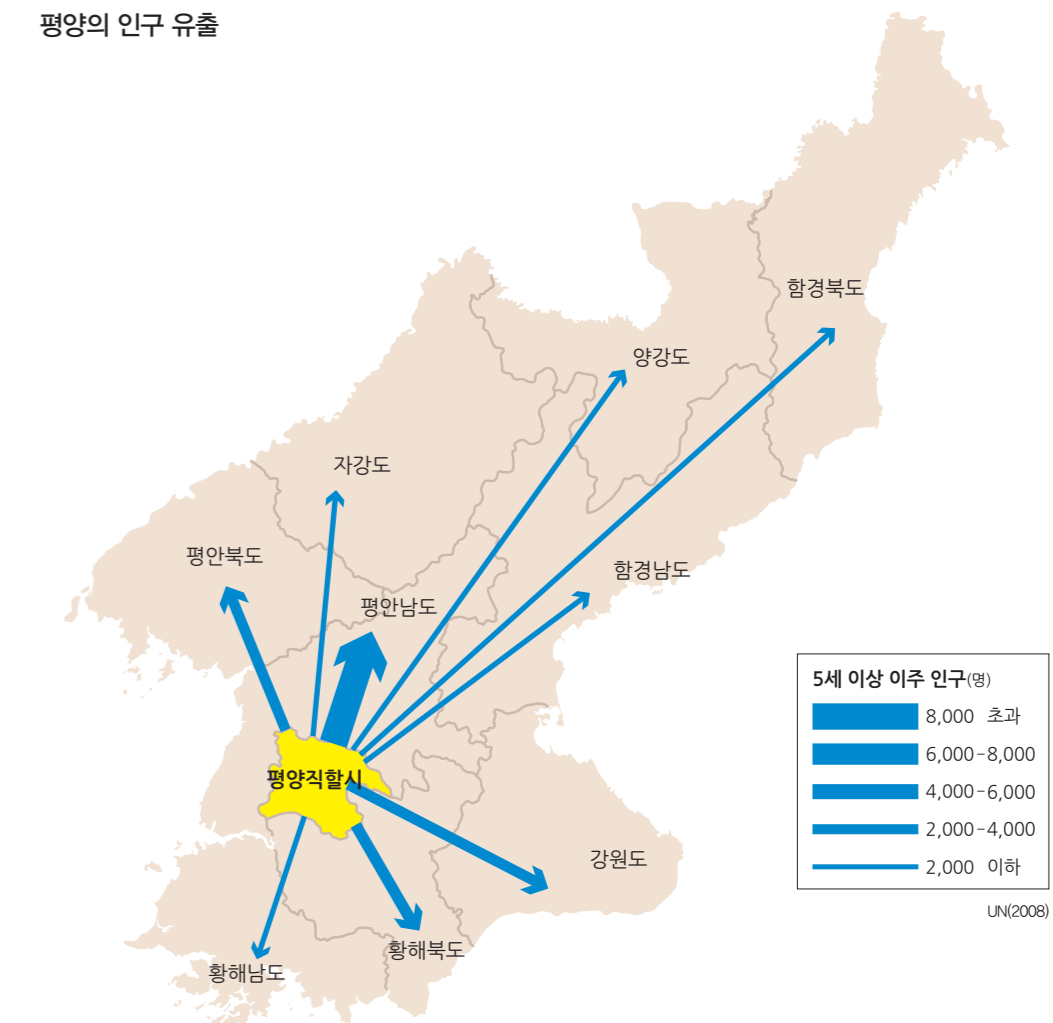
도시화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 지역은 광복 이후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빠른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도시화율은 1953년 31%에서

1976년 56.7%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의 도시화 추세는 매우 더딘 상태이다. 그러나 2018 UN 세계 도시화 전망(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에 따르면 도시화율은 2018년 이후 다시 빠르게 증가하여 2041년에는 7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74.2%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8년 현재 북한의 최대 도시는 평양직할시로 전체 인구는 325만 5천 명이며, 그 뒤를 함경남도 함흥(76만 8천 명)과 함경북도 청진(66만 7천 명)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백만 명 이상인 도시는 18개에 불과하다. 평양시의 인구는 2017년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되기도 하였으나, 2017년부터 북한 당국에서 평양시 인구를 대폭 줄이려는 인구 축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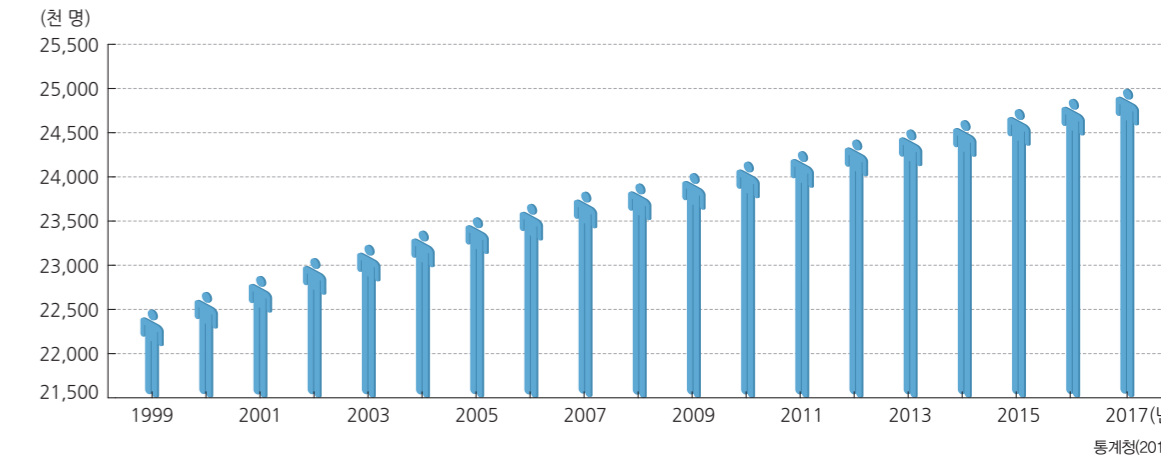
북한의 인구 이동



평양의 인구 유출



북한의 인구



북한의 도시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1940년에는 평양-청진-원산-함흥의 순서였다. 1967년에는 함흥시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평양-함흥-청진-원산의 순서였으나, 1982년에는 청진이 다시 제2위의 도시로 올라서서 평양-청진-함흥-원산의 순서를 나타냈다. 1990년대 이후로 다시 함흥시가 추월하였고, 남포시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2008년 현재 평양-함흥-청진-남포의 도시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 지역 도시 발달의 주요한 경향은 서부의 평양-남포와 동부의 함흥~청진의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북부 지역의 해산시, 강계시, 신의주시 등과 중부 지역의 평성시, 개천시, 순천시, 덕천시 등이 80% 이상의 높은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는 도시들이다.

남북 협력

남북한 교역 및 경제 협력 연혁

1988.07.07. 「민족 거둔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발표	1988.11.14. 최초 반입 승인 (대우, 도자기 519점)	1990.08.0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1990.09.25.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 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정	1992.10.05. 최초 협력 사업자 승인 (대우)	1994.06.20. 「남북한수송장비은행승인 신청에관한고시」 제정	1994.11.08.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제1차) 발표 —경제 인센티브 및 위탁 가공 교역 기술자 방북 허용 등	1995.05.17. 최초의 협력-사업 승인 (대우)	1998.04.30.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제2차) 발표 —위탁 가공 교역을 위한 생산 설비 반출 제한 폐지, 협력 사업 투자 규모 제한 폐지 등	2000.09.01. 제2차 장관급 회담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 공동 추진 합의	2001.12.31. 「남북한간수송장비은행승인 기준에관한고시」	2002.09.18.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2013.11.13.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 추진 관련 한러 사업자 간 MOU 체결	2009.10.14. 임진강 수해 방지 남북 실무 회담-방류 사전 통지 등 합의	2008.12.01. 북한, 남북 육로 통행 제한 등 '12.01. 조치' 실시 (2009.08.20. 해제)	2007.05.17. 남북 열차 시험 운행 (12.11. 화물열차 개통)	2006.06.06.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5.08.18.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	2005.08.11. 남북 해사 당국간 유선 통신망 연결	2005.08.01. 「남북 해운 합의서」 및 「남북 해운 합의서의 이행과 운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발표	2005.06.13. 「남북한간수송장비은행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관한고시」 제정 —수송 장비 운행 및 선박 운행과 관련된 기준 고시 통합	2004.10.31. 경의선-동해선 도로 공사 완료 (12.01. 개통)	2004.03.05.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임진강 수해 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채택	2003.08.28. 제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서명(09.29. 발효)
2014.02.11.-13.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 추진 관련 1차 현지 실시(나진 지역)	2014.07.15.-22.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 추진 관련 2차 현지 실시(나진 지역)	2014.11.21.-28.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 추진 관련 나진-포항 석탄 시험 운행	2014.11.24.-28.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 1차 시험 운행	2015.04.17.-23.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 2차 시험 운행	2015.08.05. 경원선 남북 구간 철도 복원 기공식	2015.11.18.-12.07.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 3차 시험 운행	2016.01.06. 북한, 제4차 핵 실험 (03.02. UN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2016.02.07.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6.02.10. 개성 공단 전면 중단	2018.08.13.-08.20. 경의선(개성-평양) 도로 남북 공동 조사	2018.11.30.-12.17. 경의선(개성-신의주)과 동해선(금강산-두만강) 철도 복원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	2018.12.26.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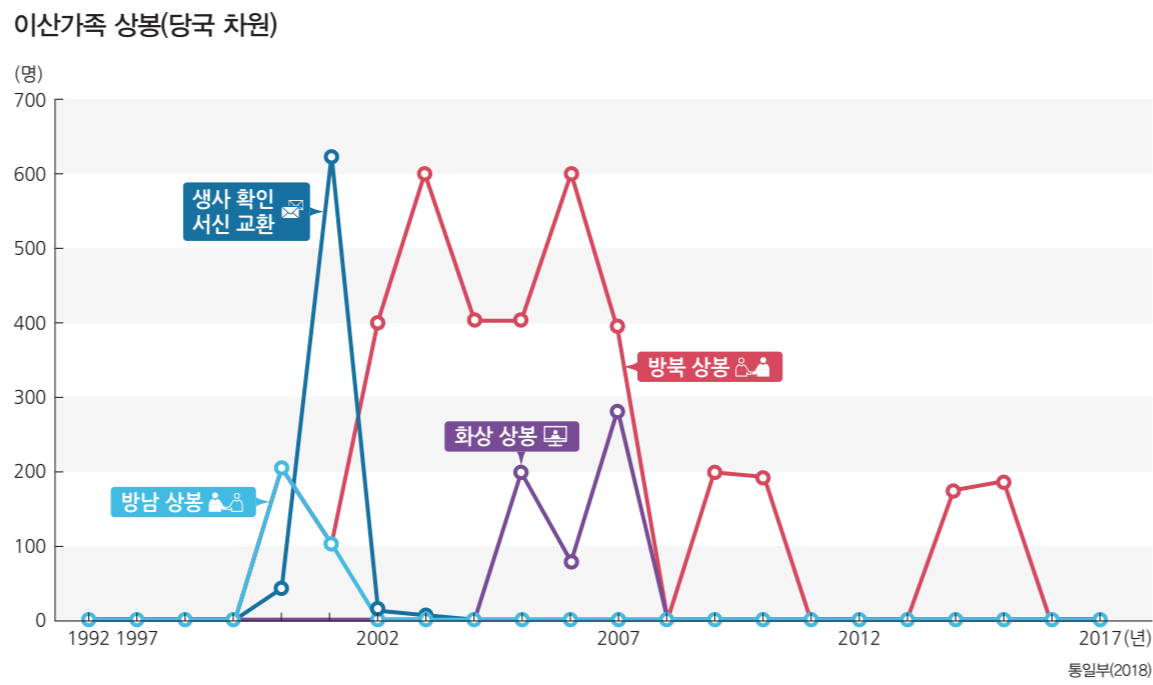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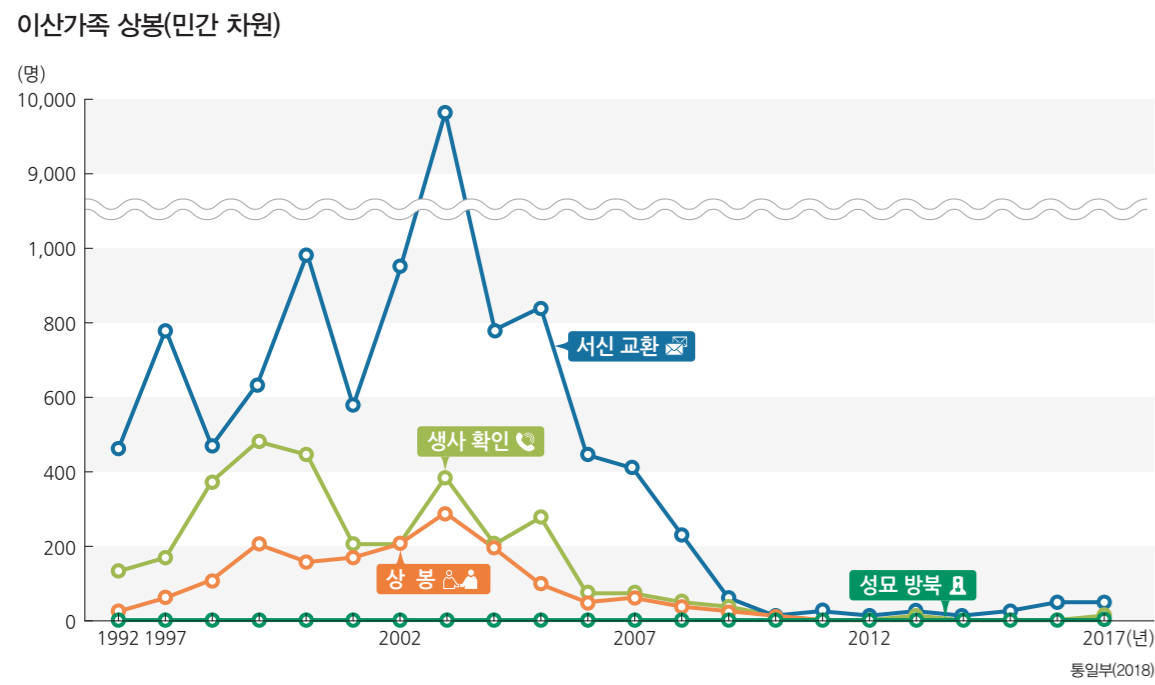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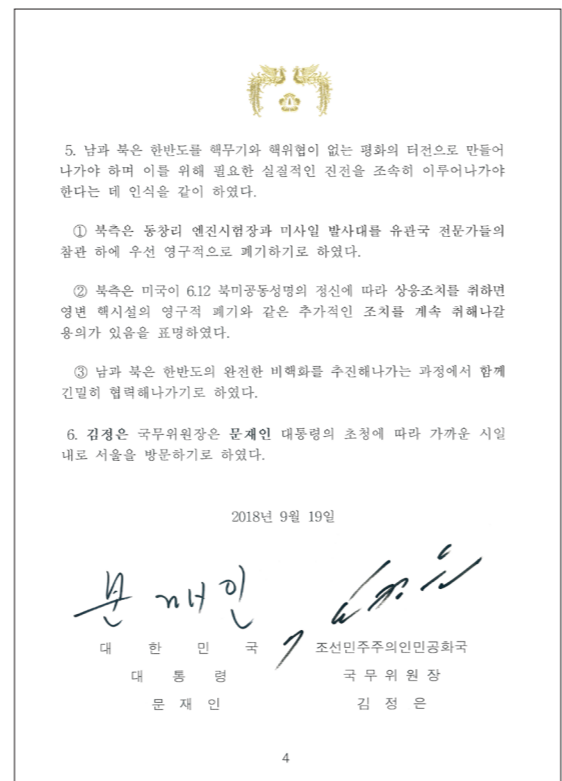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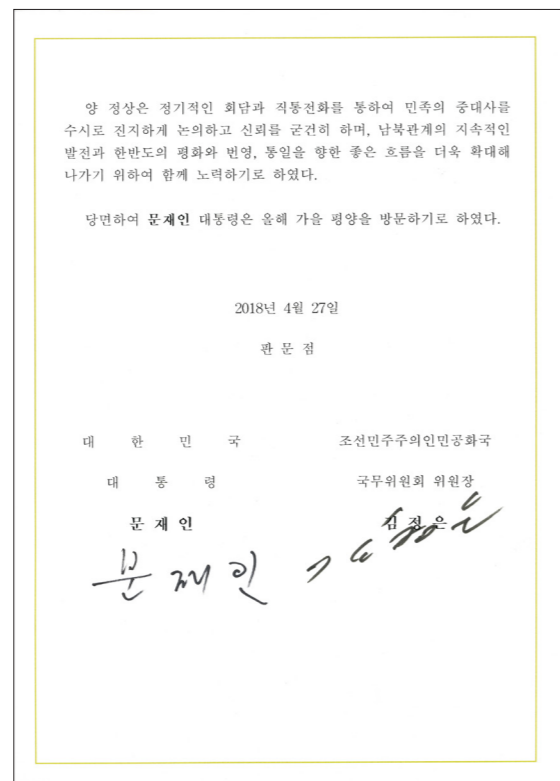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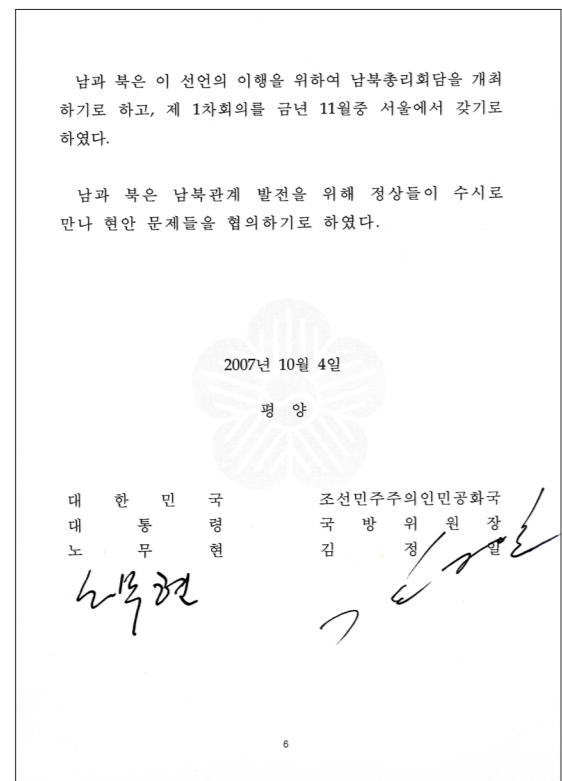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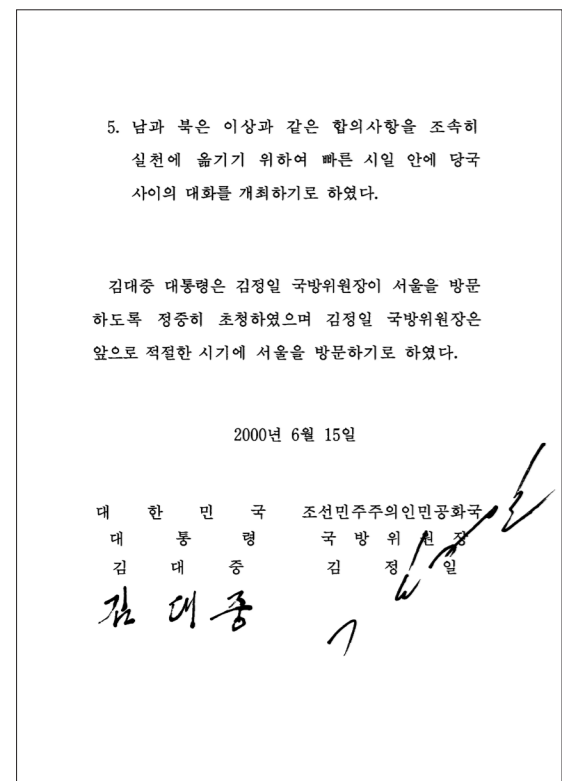
10-4 남북 공동 선언(2007)



9월 평양 공동 선언(2018)



판문점 선언(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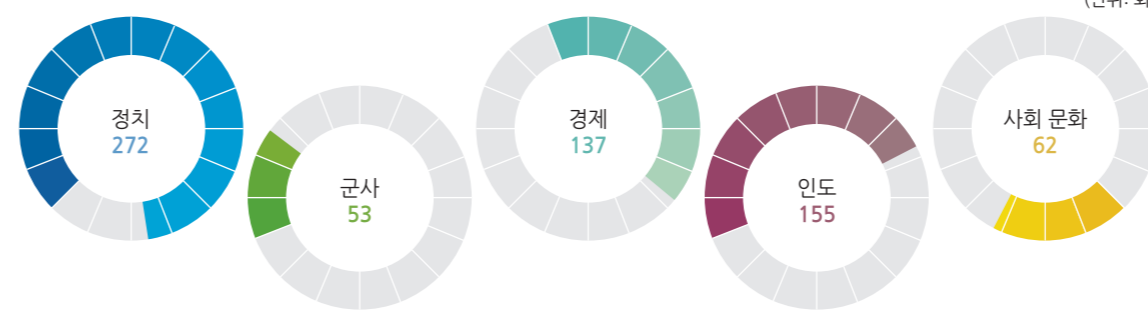


남북 관계는 1945년 분단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질서에 의해 반목과 적대의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국제 냉전 질서가 해체되었고 1997년 2월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햇볕 정책이라 불리는 전향적인 대북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분단 이후 최초로 2000년 6월 13일에서 15일까지 남북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일 국무위원장 간 남북 정상 회담이 평양에서 열렸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공동 선언에서는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경제 협력을

통한 남북한 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남북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일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두 번째 남북 정상 회담을 가졌고,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제목의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공동 성명은 '10-4 남북 공동 선언'이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서는 6-15 공동 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8년 이후 남북 관계는 경색되었다가, 2018년 남북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일 국무위원장 간 세 차례 남북 정상 회담을 진행하였다. 세 번째 정상 회담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평화의집에서 진행되었고 남북 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한 번째 정상 회담은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비공개 회담으로 진행되었다. 다섯 번째 정상 회담은 2018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고 비핵화와 함께 군사, 경제, 이산가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합의가 '9-19 평양 공동 선언'에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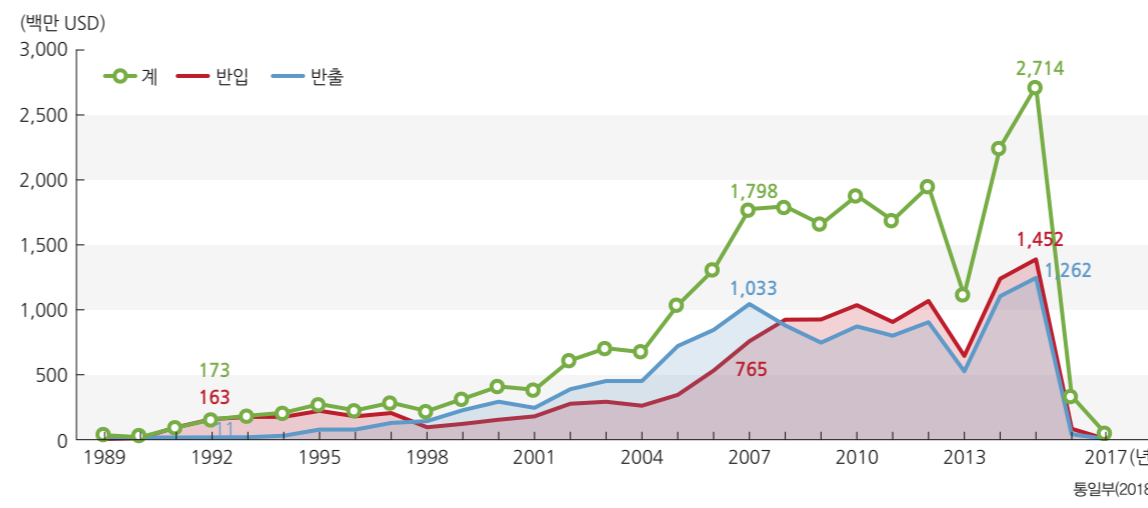
분야별 남북 회담 개최 현황(1971-2018)



인도적 대북 지원

연도	정부 차원	민간 차원	식량 차원	합계
1995	1,854	2	-	1,856
1996	24	12	-	36
1997	240	182	-	422
1998	154	275	-	429
1999	339	223	-	562
2000	978	386	1,057	2,421
2001	976	782	-	1,758
2002	1,140	578	1,510	3,228
2003	1,097	766	1,510	3,373
2004	1,313	1,558	1,359	4,230
2005	1,360	780	1,787	3,927
2006	2,272	709	-	2,981
2007	1,983	909	1,505	4,397
2008	438	726	-	1,164
2009	294	377	-	671
2010	204	201	-	405
2011	65	131	-	196
2012	23	118	-	141
2013	133	51	-	184
2014	141	54	-	195
2015	140	114	-	254
2016	2	28	-	30
2017	-	11	-	11
2018	12	65	-	77
2019	106	170	-	276

남북 교역액 추이



남북 사회 문화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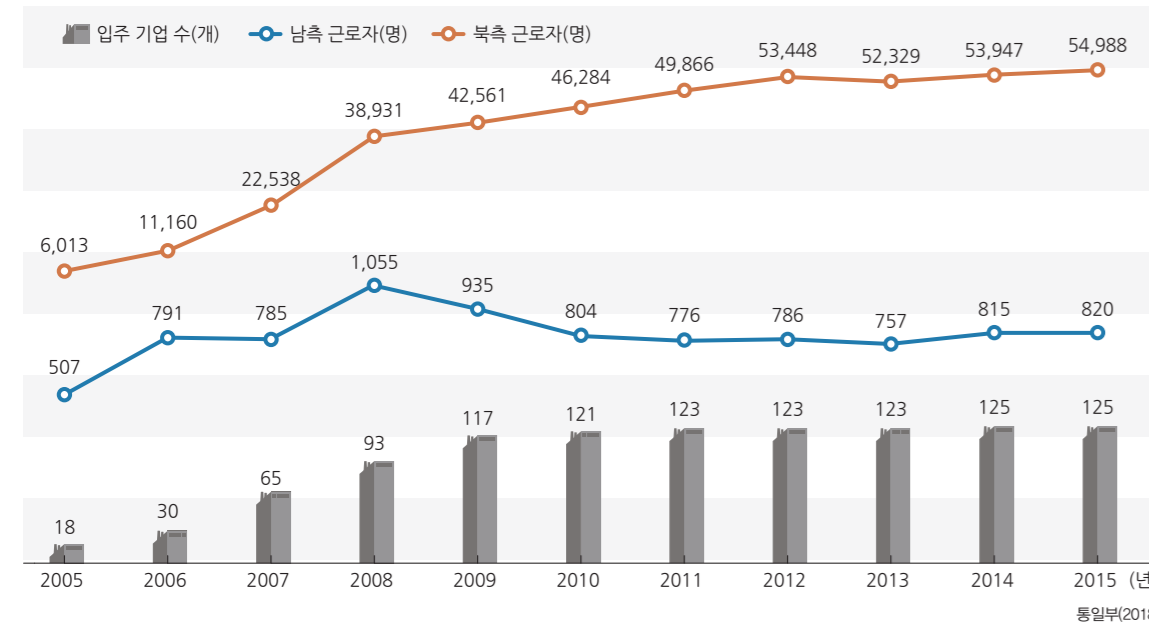


남북 간 교류 협력은 분단 이후 1960년대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0년대 들어 양국 적십자사 간 물자 교류 논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4년 11월 8일 김영삼 정부는 제1차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고, 1998년 4월 30일 김대중 정부의 제2차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와 2000년 6월 남북 정상 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경제 협력은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남북 경협은 상품 교역 등의 일반 교역에서 시작하여, 위탁 가공 교역과 직접 투자의 순으로 발전하였다. 북에서 남으로 반입되는 경우 일반 교역 및 위탁 가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성 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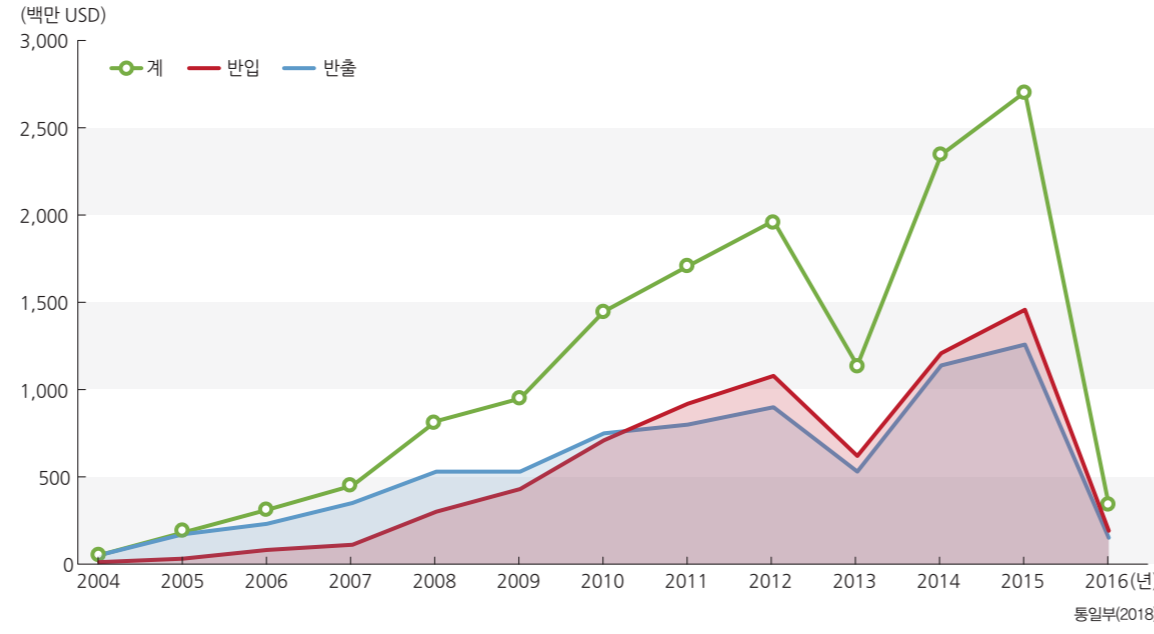
등의 사업이 안정화된 2010년부터는 경제 협력(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 기타 경공업 협력)에서의 반입액이 일반 교역 및 위탁 가공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남에서 북으로의 반출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남북 경협의 초기 비상업적 거래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다가, 점차 경제 협력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북 경제 협력의 진전은 이산가족 교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경제 교류가 가장 활발하였던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민간과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증가하다가 남북 관계가 경색된 2008년 이

후에는 급격히 축소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18년 남북 관계의 회복은 특히 남북 문화 예술 교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예술단의 상호 방문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성사되었다. 이외에도 2018년 10~12월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 체계, 2018 아시아 경기 대회 개최식 공동 입장 및 남북 단일팀 구성 참가 등 체육, 학술, 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개성 공단 입주 기업 수 및 근로자 현황



개성 공단 사업 교역액 추이



개성 공단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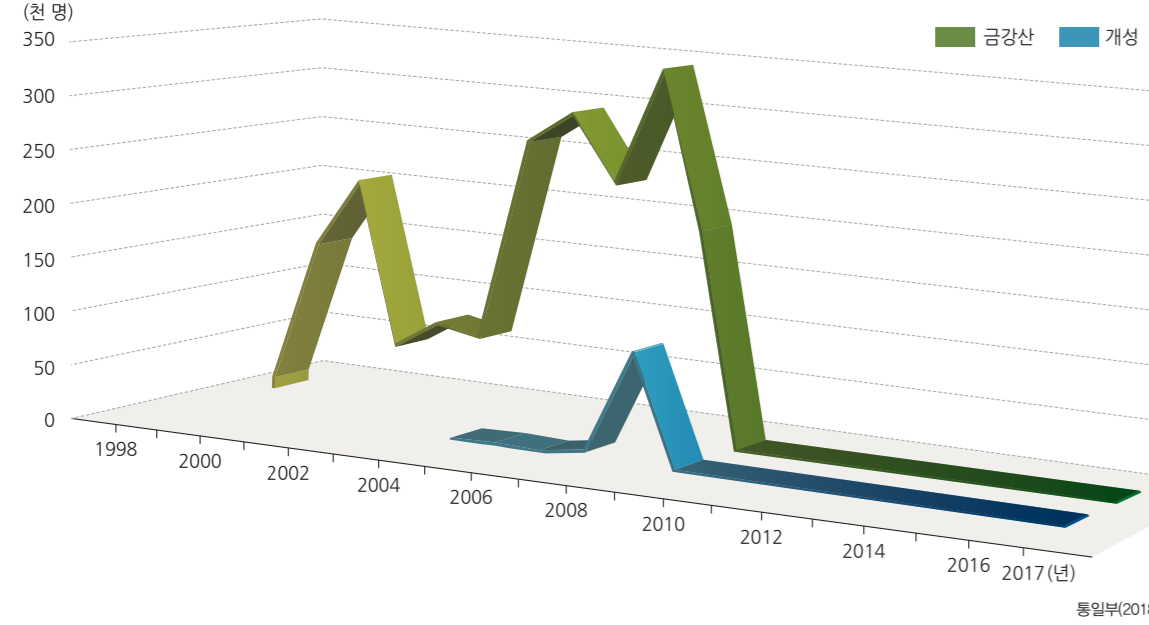
경의선 도로 출입 시설



개성 공단의 근로자



금강산과 개성 관광객 추이



금강산 관광

주요한 남북 경협 사업으로는 금강산 관광 산업,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개성 공단 개발 사업 등이 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18일에 시작되었고, 북측에서는 2002년 11월 13일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제정하여 금강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남과 북은 2000년 7월과 8월에 개최된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하여 경의선 철도(서울-신의주)와 도로(문산-개성)의 연결에 합의하였다. 이후 2002년 9월 18일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 착공식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3년 초부터 경의선 도로를 통하여 개성 공단 개발을 위한 임시 통행이 시작되었고, 동해선 도로 역

시 2003년 2월 11일 임시 도로 개통식 이후 금강산-육로 관광을 위해 이용되었다. 2007년 5월에는 경의선 문산역-개성역, 동해선 금강산역-제진역 구간에 대한 열차 시범 운행하였으며, 그해 12월부터는 경의선 문산-봉동 간의 화물 열차 정기 운행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북 관계의 경색에 따라 2008년 11월 28일에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는데, 이때까지 총 222회(편도 기준) 운행되었다. 개성 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남측의 현대아산과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 협의로 시작되어, 2003년 6월 30일 1단계 330만㎡에 대한 개발을 시작하였고, 2004년 12월 15일 입주 기업에서 첫 제품을 출하하였다. 2015년 12월 개성 공단 사업은 입주 기

업 125곳, 북측 노동자 5만 5천 명, 누적 생산액 32.3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폐쇄 결정으로 2019년 8월 현재 가동 중단 상태이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의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이행을 위해 2018년 6월 26일 10년 만에 남북 철도 협력 분과 회담을 가지고 남북 철도 연결 구간 공동 점검을 실시하고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선형 사업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현지 공동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11월 30일부터 18일간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약 400km)과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약 800km)을 공동으로 조사하였고, 12월 26일 개성 판문점에서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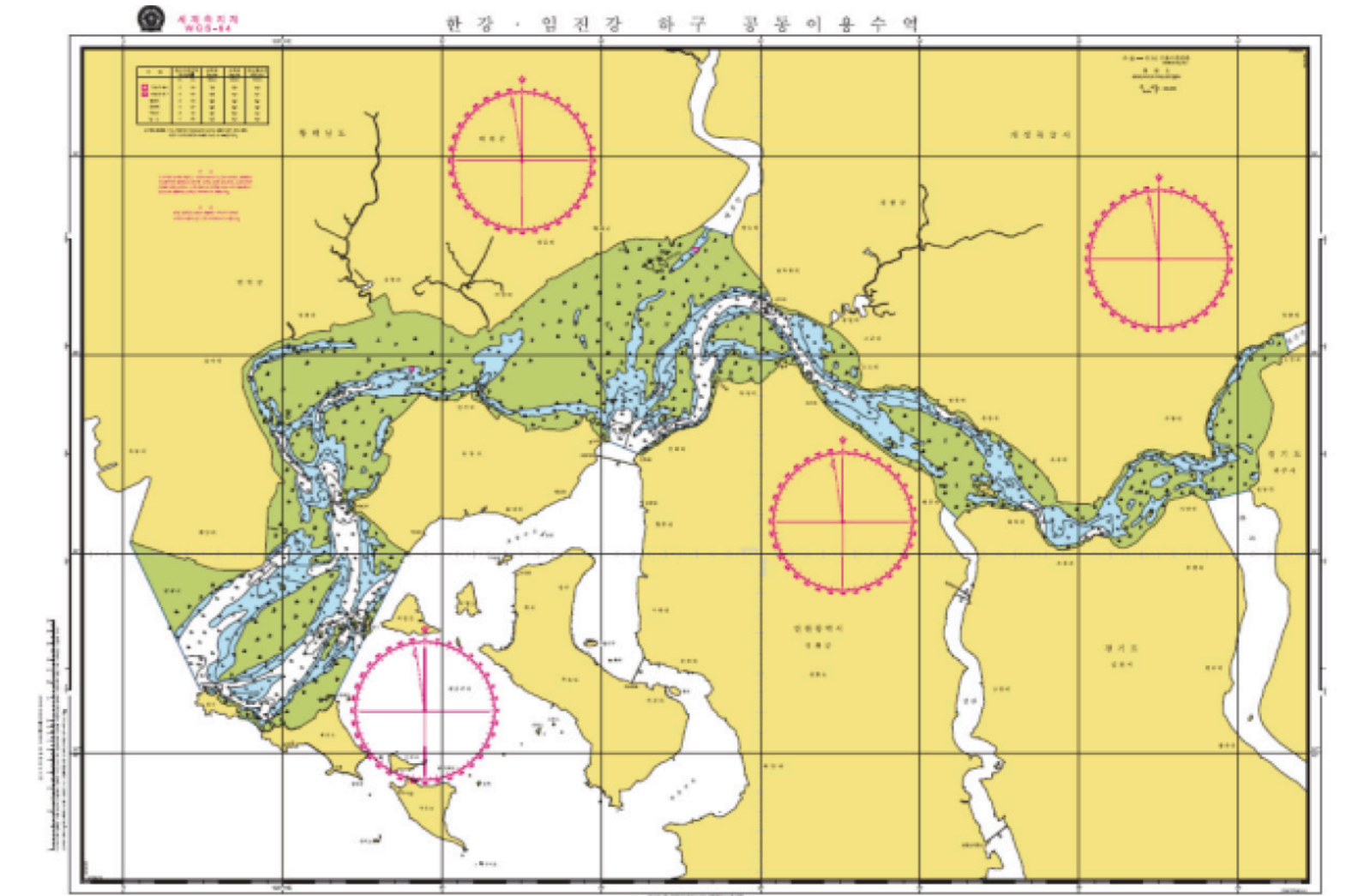


철원 중부 전선 비무장 지대 감시 초소(GP) 폭파 제거



비무장 지대 감시 초소(GP) 시범 철수

한강-임진강 구역 해도



남북 상호 검증



지뢰 제거 작업

남북 정상 회담 군사 분야 합의(2018)



2018년 9월 19일 평양 정상 회담에서 평양 공동 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군사 분야 합의서'는 적대 행위 중지, 비무장 지대 평화 지대화, 피해 평화 수역 조성, 교류 협력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등 기존의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로, 2018년 10월 1일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JSA) 비무장화 작업을 시작하여 초소·화기 철수 및 인원 조정, 남·북·유엔사 공동 검증 등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 또한, 11월 1일부터 비무장 지대 내 쌍방 1km 이내 근접 비무장 지대 감시 초소 시범 철수를 진행하여, 11월 30일에는 시설물을 보존하기로 한 1개를 제외한 10개 비무장 지대 감시 초소에 대해 철거·파괴 작업을 완료하였다.

12월 12일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 군인들이 상대측 GP를 직접 방문하여 철수 및 파괴 조치 상태를 확인하는 상호 현장 검증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강 하구에서의 민간 선박 자유 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위해 남북 공동 수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남북 관계의 진전은 남북 간 접경 지역의 긴장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